

## 광주 학원비 최고 8배 폭리

교육청 공시 5만1,700원 수강료가 학원선 40만원

###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가중...단속 시급

광주지역 입시·보습학원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 기준 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4~8배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매년 '수강료 기준금액'을 공표,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 입시학원 단과는 5만1천700원(월 20시간 기준), 종합반은 13만6천500원(월 6시간 기준)이며, 보습학원은 1과목 5만1천400원(월 20시간 기준)이다. 서부교육청은 종합반 기준금액만 16만4천800원(월 120시간 기

준)으로 약간 더 높다. 동부·서부교육청은 기준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경고처분(30점 이하)·휴원(31~65점)·폐원(66점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지키고 있는 학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구의 한 영어 전문학원은 영어 한 과목 주 3일 수업에 기준금액의 무려 8배인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모 입시학원은 과목당 20만원(월 16시간)을 받고 있다. 기준금액(5만1천700원, 월 20시간 기준)에 비해 강의시간은 월 4시간 적지만 수강료는 무려 14만8천300원이 더 많다.

북구의 한 입시학원은 종합반 수강료로 월 24만원(월 4시간 기준)을 받아 기준금액(13만6천500원, 월 6시간 기준)에 비해 강의시간은 하루 2시간 적으면서 수강료는 되레 10만3천500원을 더 받고 있다.

서구의 한 입시학원도 단과 2과목에 월 20만원(주 4시간 기준)을 받아 기준금액(5만1천700원, 월 20시간 기준)보다 9만6천600원을 넘겨 받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학원들이 기준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지난해 통틀어 11건, 올 1월부터 3월까지 10건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 정보(여·47·광주 서북구 두암동)씨는 "턱없이 비싼 학원 수강료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며 "수강료 초과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강력한 단속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 당국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이 낮은 측면이 있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원을 강력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물가인상 핑계를 대는 건 직무유기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입시·보습학원은 지난 2002년 858개에서 올 5월 말 현재 1천590개로 4년여 동안 85.3% 늘어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고액 사설학원의 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조사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한여름의 코스모스

한낮 불볕더위가 한창인 7월,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17일 무안군 일몰을 산정리의 코스모스밭을 어린이들이 거닐며 놀고 있다. /위직림기자 jrvi@kwangju.co.kr

## 범여 후보들 "광주가 희망이다"

### 광주·전남 잇단 방문...호남민심 변화 조짐

'제2의 광주 경선 신화를 만들어라.'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 떨어진 지상명령이다.

지지부진하던 범여권 대통합 논의가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광주·전남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이 현실화되면서 '갈 곳 모르던' 호남 민심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광주·전남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지난 6월 9~11일 광주일모·리서치&리서치 조사 당시 25.2%로 1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범여권 후보가 결정되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었다.

특히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군소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그해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의 극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2002년의 신화'에 대한 기억이 범여권 주자들의 발길을 광주로 이끌고 있다.

'반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범여권의 대선 후보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다. 범여권 주자들이 광주·전남 지역 경선 승리에 '올인'하는 이유다.

범여권 입장에서 광주·전남 등 호남은 한나라당 절대 우위라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다. 광주·전남의 표심은 수도권 거주 호남 출신 유권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의 광주·전남 방문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광주를 방문한 여권 대선 주자들은 손학규 전 경가지사를 비롯, 정동영·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회찬 전 국무총리, 김혁규 의원, 김두관 전 행정부 장관

등이며, 17일에는 추미애 전 의원, 18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지역 유력인사나 현역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 대선 캠프의 노력도 점점 열을 띠고 있다. 범여권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선 캠프 참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장·군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구애 정도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과외 조짐도 있다. 일부 캠프에서 주자들의 과거 전력을 들며 '광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음해성 소문을 유포시키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 후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내각제·대선 결선투표제 생각해 봐야"

## 盧대통령, 제헌절에 개헌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민주주의의 선진국, 선진 정치 발전을 위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각 당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의 이행을 당부하고, 이

를 위해 올해 대선에서 개헌의 공론화를 촉구하면서 헌법개정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각제는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北核 6자회담 오늘 재개

### 北·美, 핵신고 등 사전조율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2·13 합의의 2단계 조치를 협의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18일 개막한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7일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김 부상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대사관을 찾는 형식으로 북·미 회담을 했다"면서 "힐 차관보와 김 부상 등은 회담에 이어 장소를 한 호텔(중국대만점)로 이동해 오찬까지 함께 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

폐쇄 이후 불능화를 연내에 실현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목록협의 포함)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이날 평양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2단계 조치의 목표와 6자회담 당사자들의 의무, 일련의 행동 등을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러시아, 일본 측 수석대표와 잇따라 양자협의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배이정·연합뉴스